‘野의 심장’ 광주 민심을 잡아라 … ‘광주시장’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로

민주 텃밭 사수냐 安신당 교두보 확보냐
향후 야권 재편 싸고 사활건 싸움 예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오는 3월께 신당을 창당하기로 함에 따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야권 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안 의원은 21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새 정당은 기득권 정치세력이 외면한 통합의 길을 갈 것이며, 새 정당은 한국정치의 수십 년 병폐를 뿌리뽑고 대변화를 기필코 이뤄내겠다”며 “오늘의 창당 선언은 훗날 대한민국 역사의 획기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 측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포함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 ‘安 신당’ 간 3자 대결구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호남에서는 ‘텃밭 사수’를 위한 민주당과 호남을 ‘교두보’로 삼기 위한 신당 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에 따라 그동안 지방선거 이전 창당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 해왔던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새정치추진위원회 중심의 세 확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안 의원이 이날 신당 창당을 선언함으로써 지방선거 이전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관망을 해오던 일부 지지세력들의 움직임이 더욱 적극적이며, 세 확산 및 규합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 이후 야권 주도권의 향배를 가늠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급부상하게 됐다.

야권의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安 신당’으로서는 민주당의 텃밭이자 심장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려 할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수성’ 해야하는 처지여서 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남 민심의 진원지이자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광주시장 선거는 더욱 주목받게 됐다.

또한, 신당이 창당되면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신당 파괴력이 주목된다.

하지만, ‘安 신당’에 참여하려는 인사들이 상당수 민주당 출신인데다, 일부는 ‘새 정치’ 보다는 자신의 선거 출마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인사들도 상당수여서 지역민들이 ‘신당’을 참신한 정당으로 받아들여 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신당’ 후보로 참여하려는 인사들이 많아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공천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3월에 창당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공천 룰’을 미리 정해놓지 못하면 공천이 늦어지면서 신당 후보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다,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 등 기성 정당의 행태를 되풀이할 경우 존재감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을 신당에 내줄 경우 향후 야권 재편과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민심 잡기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 신당 창당이 이뤄지기까지, 나아가 6·4 지방선거까지 지역 민심이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철수 창당 선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1일 오전 제주벤처마루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安風 차단” 전북으로 달려간 민주당

호남 국회의원 워크숍
지방선거 전략 논의

호남 국회의원들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에 일고 있는 ‘안철수 바람’에 맞서기 위해 적극 나섰다.

민주당 광주 및 전남·북 의원들이 21일 오후 6시 전북 부안군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만찬을 겸한 워크숍을 열고 호남지역의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이날 모임은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의 제안에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완주)이 호응하면서 만들어졌다. 지난 2012년 대선 이후에 호남 의원들이 모인 것은 처음으로, 지역 국회의원 26명 중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새로운 정치의 방향과 혁신에 대한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호남 국회의원이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뜻에서 모였다”며 “호남 지역민들에게 보낼 메시지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부에서는 ‘안철수 바람’이 한풀 꺾였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본격화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이 지역 여론의 지지를 받는 등 민주당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추진을 ‘야권 분열’로 규정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분열의 정치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날려서는 안 된다”며 “견제에 동의한다면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친안(친안철수)’ 그룹으로 분류되는 김영환 당 인재영입위원장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안 의원이 ‘두번 양보론’을 언급하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양보받을 차례”라고 언급한 데 대해 “서울시장 후보를 누가 어떻게 양보한다는 것인가. 구시대 정치의 냄새가 물씬 난다”며 “국민과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쳐”

여야, 고객정보 유출 성토
2월 임시국회서 입법 다짐

여야는 21일 KB금융·롯데카드·NH농협카드 등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대책 등을 다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발가벗겨진 기분이라고 한다”면서 “카드사 경영진이 기자회견에 나와 허리 굽혀 사과한다고 국민 분노가 가라앉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묻지마식 개인정보의 취합을 막고 무분별한 유통을 확실히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세밀히 검토해야 하고, 정책위도 검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라면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금융당국의 무능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2011년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농협, 현대캐피탈 등 4개 금융기관에 내려진 제재는 고작 기관경고, 감봉, 과태료 600만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더구나 최근 3년간 두 차례나 떠들썩하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피해 규모조차 가늠 못하는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여러 부처에 분산된 법망을 정비하고, 정보유출이 경제 피해라는 시각에서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책임소재를 가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교육의원 일몰제 유지 땐 일괄사퇴”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들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은 국회가 오는 28일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1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개특위는 올해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교육의원 일몰제를 유지한다면 전국 교육의원 79명이 총사퇴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9대 총선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는 총회와 교원단체의 요구안에 서명했던 여·야 의원 51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국회 정개특위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육의원총회 회장인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이 사퇴하면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의 의사일정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서울지역은 교육위원회 위원 15명 중 8명이 교육의원, 7명이 정당 소속 시의원이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다음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치르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연합뉴스